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

혁신성장 ⇔ 공정분배 · 생산적 복지

- △ 혁신성장 : 시장구조혁신 & 신산업전략 & 북방경제
- △ 공정분배 : 시장감시강화 & 일자리창출 & 비정규직 대책
- △ 생산적 복지 : 복지투자 & 인적자본투자 & 공정한 조세체계



□ **공정성장론 중간보고회(100분)**

시간	식전행사(10분)	홍석빈부원장(민주정책연구원)
07:30 ~ 07:40	I. 국민의례(순국선열 묵념) II. 축사	
	공정성장론 중간보고회(90분)	좌장 박원암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
07:40 ~ 08:20	I. 공정성장론 중간보고(40분)	- 안철수 의원
08:20 ~ 09~00	II. 참석자 의견발표(40분)	-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 - 이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 장하성 교수(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 박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 원내대표)
09:00 ~	III. 질의응답 및 마무리(10분)	

I. 한국경제의 위기 : 40년 장기불황 가능성

1. 경제·사회적 요인

-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 인구고령화의 심화 → 저성장으로 진입
(생산가능인구 2017년부터 감소 → 2060년까지 역삼각형 인구구조)
 - 대외변수(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중국 추격) → 불확실성 심화
 - 부채의 증가(국가·기업·가계(가계부채 7대 위험국가. 맥킨지))
 -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 → 소득불평등 악화, 양극화 심화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40년 장기불황 우려
(40년 장기호황 vs 성장, 저축률 高 vs 低, 중소기업 強 vs 弱, 내수시장 大 vs 小)
- ☞ 3~4년(2017년 생산가능인구 정점 이후 감소)내에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40년 장기불황의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

2. 제도·정책적 요인

: 불공정한 시장·분배(재분배) →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① 불공정한 시장 : 독과점 경제구조 & 불공정 경쟁

o 독과점 경제구조

- 땅콩회항 사례 / 재벌 내부거래 (예) 국내 SI vs 독일 SAP / 수직계열화 (예) 영화산업 vs 파라마운트 판례

o 불공정 경쟁

-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 인력 빼가기, 동물원구조(독점계약) vs IBM 사례

⇒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

② 불공정한 분배(재분배)

○ 분배(임금시장) : 국민총소득, 기업 및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비교

- 1990년대 국민총소득 5.9%, 기업 6%, 가계 5.7% (골고루 분배)
- 2000~2009년 국민총소득 3.5%, 기업 7.5%, 가계 2.4% (격차 발생)
- 2008~2012년 국민총소득 2.1%, 기업 5.1%, 가계 1.4% (격차 확대)

⇒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임금)로 가지 않고 기업에 편중

○ 재분배

-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수준, 정부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 매우 낮음
- 이익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의 2013년 실효세율 16.37%, 1천억~5천억 이하 기업은 18.67%, 500억~1천억 18.6%, 200~500억 17.62%, 100~200억 16.44%

⇒ 느슨한 사회안전망으로 새로운 도전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

③ 정부의 대응

- △신성장동력 부재 △3무 성장(고용·임금·분배) △시장의 불공정거래(대·중소기업 간) → 저성장 진입·경제력 집중·소득불평등 악화 → 양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고수(낙수효과는 이미 파산) → 혁신 잠재력 저하 → 경제 리스크 ↑, 반면에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을 비용으로 생각

⇒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제도·정책적 요인이 성장잠재력을 가로막고, 히든챔피언 탄생을 가로막는 反성장요인으로 작동

⇒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질서 및 정책을 혁신하여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 『공정성장론』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필요.

II.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

■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 :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 혁신성장 : 시장구조혁신 & 신산업전략 & 북방경제
- 공정분배 : 일자리창출 & 시장감시강화 & 비정규직(업무중심)
- 생산적 복지 : 자활 & 보육·교육 & 재교육

□ 혁신성장 :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성장동력 3축 : 시장구조혁신, 신산업전략, 북방경제

1. 시장구조혁신

: 공정하지 않은 시장질서는 성장동력을 저하

- 대기업(재벌) →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 중견기업(히든챔피언)·대기업으로 성장
 - 국가R&D 구조개혁,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공정한 시장질서)
 -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 ‘강기업육성특구’
- 창업 → 성공으로(or재도전 기회)
 - 창업토양, 총괄체계, R&D(과정평가·중복과제), 공정한 시장감시 및 처벌, 초기시장 형성, 연대보증제 개선

2. 신산업전략

○ 개척자 전략

(예) 경쟁력 5대산업(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 혁신요소(문화적 요소+IT+디자인 등) 융합 → 고 부가가치 창출(→ 개척자 전략)

○ 추격자 전략

(예) 선진국 주도 5대 산업(의료·바이오, 에너지, 안전, 지적서비스, 항공우주) → 추격자 전략

○ 융합전략(제조업+혁신요소(IT, 문화, 디자인 등) :

(예) 스마트 팩토리(로봇 또는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도 동시에 육성해야)

(예) 기존 제조업(섬유, 합판, 가발, 신발 등) + 혁신요소(문화적 요소+IT+디자인 등) 융합 →
고 부가가치 창출

○ 광역경제권

- 광역경제개발기구 & 광역경제개발재정

○ 신산업전략 인프라 구축

- 중앙정부-광역경제권-민간의 네트워크 협력

3. 북방경제

○ 한반도 경제권

- 개성공단 2.0 프로젝트 &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 동북아 경제융합 허브

- 북방자원(에너지원 확보) & 인프라 투자(철도-항만-도로-에너지-통신망)

○ 유라시아시대 개막

- 물류혁신(부산→금강산→중국→러시아→유럽)

- 한·중·일·러 스마트그리드

- 환황해 & 환동해 경제권 형성

□ **공정분배 :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보조 축)**

: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은 자체로 임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와 내수활성화 효과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게 동기부여(새로운 분야 투자 및 노동생산성 향상) 제공,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노사안정(노사정대타협 기반) 및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공정분배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며,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임.

1. 시장감시강화

- 내부거래 & 가격후려치기 & 인력빼가기 &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 감시기능 강화
-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2.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비정규직 해소 및 직무중심 급여·채용시스템

- 사람 → 업무
- 직무중심 채용 및 보수체계 확립

□ **생산적 복지 :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보조 축)**

: 생산적 복지는 어르신·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유도,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을 통해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 또한 공정한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이자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1. 복지투자

- 자활(어르신, 장애인 등)
- 교육·보육시스템(경단여성, 맞벌이 등)
- 사회안전망 강화(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2. 인적자본 투자

- 재교육을 통한 패자부활 & 전직

3. 공정한 조세체계 →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 지출구조 합리화(낭비요인 제거) → 감면혜택 축소 →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정상화
- 법인세·소득세 누진제 확립

Ⅲ.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 시장

-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계열분리명령제, 수사권 부여 등) 강화
- 연구개발비(R&D) 구조개혁
 - 창업, 중소·중견기업 집중, 과정평가·중복과제 허용 등
- 창업성공 생태계 조성(창업에서 성공으로)
 - 창업토양조성, 총괄적 조정체계, 시장감시 및 처벌, 초기시장 형성, 연대보증제 개선
- 내부거래 및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

2. 공정 분배

- 비정규직 제도 개혁(사람 → 업무)
- 최저임금 현실화(←영세기업 지원정책)
- 생활임금제 확산
- 직무중심 급여와 채용체계 확립

3. 공정 조세

- 재정누수제거 & 재정구조개혁(우선순위) & 감면혜택 ↓
- 법인세 정상화(원상회복 & 실효세율 포함)
- 누진체계 강화
- 증세 논의 → 중부담·중복지 국가

IV. 공정성장 3법

○ 1차적으로 공정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임.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위원 임기를 5년(<3년)
-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 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계열분리명령)
- 조사 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중기청장은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 하도록
-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2027년12월31일까지 효력)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 벤처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참고) 공급주도성장론 vs 소득주도성장론 vs 공정성장론



	공급주도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공정성장론
성장공식	기업 투자환경 조성(규제철폐) → 고용률 제고 → 소비·투자 확대 → 가계소득증대	임금인상 → 가계소득 증대 → 소비·투자 확대 → 내수경기 활성화	공정제도 → 혁신·성장 → 일자리 창출·임금 인상 → 소비·투자 확대
성장동력	기업투자	임금인상	공정제도&혁신성장
정부역할	기업투자 유도	소득재분배	공정제도·소득재분배
복지정책	선별적 복지	생활 복지 (보편적 복지)	중부담·중복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
조세정책	법인세 정상화 반대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누진 세제 확립
극복과제	낙수효과 실효성 문제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정부 정책추진 의지